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jklee@kdi.re.kr

I. 머리말

2016년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속도전’(200일전투와 70일전투)을 전개하며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경제부양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다소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비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¹⁾

하지만 2017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이때부터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에 대해 ‘민생목적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는 대신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제시하는 규정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2017년 북한의 정책은 제재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7년부터 북한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안보리 결의안 2321호(2016. 11. 30)와 2018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2375호(2017. 9. 11)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²⁾ 왜냐하면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대한 대응은 주로 2017년의 정책동향과 연관이 있으며,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2018년 정책전망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각각의 제재에 대해 주요 내용과 경제적인 영향을 보고,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을 분석할 것이다.

1) 안보리 결의안 2270호(2016. 3. 3)가 채택되었으나, 민생부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2) 2017년에는 안보리 결의안 2356호(6. 3), 2371호(8. 6), 2375호(9. 11), 2397호(12. 22)가 채택되었지만, 본고에서는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폭으로 강화되었던 안보리 결의안 2321호와 2375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대한 대응

1. 주요 내용과 영향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2016. 9. 9) 이후 2016년 11월 30일에 채택되었다. 민생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던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비교하여 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석탄 수출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은, 동, 아연, 니켈), 조형물 수출금지, 북한 공관에 대한 외교활동 제한조치(인력 감축 촉구, 은행계좌 제한, 임대수입 금지) 등도 도입되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급감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66.0% 감소했으며, 물량 기준으로는 78.5% 감소했다.³⁾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수출은 37.3% 감소하면서 전체 대중 교역량까지 함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14.5%). 이를 기여율로 계산해 보면, 석탄 수출액의 감소가 전체 대중교역의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79%에 이른다. 석탄 수출 상한제가 전체 교역량 급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림 1]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영향: 2017년 북한의 대중무역(분기별)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8. 2. 1).

3)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금액 및 물량 기준): 2016년(11.8억달러, 2,250만톤) → 2017년(4.0억달러, 483만톤)

2. 북한 당국의 정책대응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경화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품목인 만큼 실제적으로는 외화수입에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자력자강을’ 다시 한 번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력자강을 “그 어떠한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과학기술이며 이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봉은심, 2017, p.29),⁴⁾ 북한은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과학기술 교류를 차단하는 대북제재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위와 정도가 크지 않다면, 자신들의 경제는 “대외시장에 의존하는 수출형경제가 아니라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제 발로 걸어가는 경제”인 자립형 경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⁵⁾

하지만 북한이 2017년에 추진한 정책들을 2016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200일전투’나 ‘70일전투’와 같은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산화가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공업, 에너지, 농업 부문 등에서의 국산화가 많이 언급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경공업 부문에서의 국산화 정책은 여러 매체를 통해 수차례 강조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시되었다. 주민들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공업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토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와 자재를 국산화하고, 경영전략을 바로 세워 생산을 확대하며, 소비제품들의 다종화, 다양화, 질적제고에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조는 북한 매체에서도 자주 관찰되는데, “경공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노동생산능률을 높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한 량적 및 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논리이다(허철룡, 2017, p.10).⁶⁾ 주민들의 높아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경공업이 성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공급은 해외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품의 품종과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규격화 사업”도

4) 봉은심, 「자력자강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의 위대한 동력」,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 제3호, 2017.
5) 『조선신보』,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 2017. 3. 2.
6) 허철룡, 「현시기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2017.

진행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제품의 디자인(제품도안)과 포장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또한 류정원(2017, p.66)은⁸⁾ “과학기술은 자립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었다 하여도 남에게 예측된 경제는 절름발이경제로 밖에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제토대를 가지고서는 경제강국을 절대로 건설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김정철(2017, p.10)은⁹⁾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길에 자주, 자립이 있고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의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명성 4호’의 발사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아크릴계 칠감’을 모범 사례로 들기도 했다. 종합하면, 주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공업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자강력제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 제재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산화가 강조되었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석탄 수출이 감소해 이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화력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이 되는데,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석탄 생산을 늘이고 그것을 제때에 수송해주어야 한다.”라면서 화력발전의 정상화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석탄의 발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소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설비의 기술개조 사업을 잘하여 같은 증기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면서 생산성 향상을 주장하기도 한다(김남웅, 2017, p.7).¹⁰⁾ 또한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과 큰 도시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중소규모의 발전소는 전국 도처에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내에 남아 있는 석탄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연소효율이 높고 공해가 적은 새로운 설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라면서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한다(박상철, 2017, p.22).¹¹⁾ 한편, 주체철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언급되는데, “무연탄에 의거한 철 생산체계를 완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는 올해 적대국들의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없이 주체철의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조선신보』, 2017. 12. 13).¹²⁾ 이를 통해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북한 당국도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농업 등 각 부문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가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¹³⁾ 제재가

7) 로명성,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3호, 2017.

8) 류정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사상의 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7년 제1호, 2017.

9) 김정철, 「과학기술강국건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2017년 제4호, 2017.

10) 김남웅, 「전력생산을 늘이고 전력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 방도」,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2017.

11) 박상철, 「현시기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1호, 2017.

12) 『조선신보』, 「만리마 시대 경제부흥과 생활향상 -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체철신물」, 2017. 12. 20.

직접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자강력제일주의'의 고수 이외에는 다른 정책적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대한 대응

1. 주요 내용과 영향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2017. 9. 3) 이후 2017년 9월 11일에 채택되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광물(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안보리 결의안 2371호(2017. 8. 6)를 보완하여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도 금지하는 한편, 정제유 수입에서도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과의 모든 합작·협력 사업을 설립,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면서 기존 사업도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이미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북한 수출의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수출금지 된 셈이고, 역대 안보리 제재로는 최초로 북한 민생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며, 자본수지와 소득수지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¹⁴⁾ 모두 다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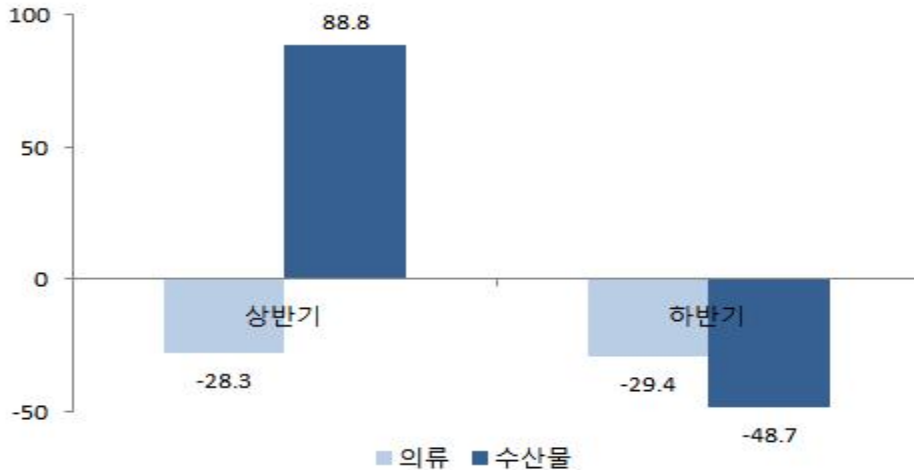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는 각각 2017년 9월과 12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올해 조금 더 지켜봐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 대략 예측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 대중수출(2016년 기준)의 약 5%를 차지했던 수산물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2017년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88.8% 증가하던 수산물 수출은 하반기가 되면서 48.7%까지 급감하게 되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안 2356호(2017. 8. 6)가

13) 일례로, 김광남(2017, p.35)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영농물자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내부 예비물 효과있게 동원리용한다면 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제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자력자강의 힘으로 같은 노력과 영농물자를 가지고도 로동생산능률을 비할 바 없이 높여 영농작업을 질적으로 수행하고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 생산을 훨씬 늘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4) 이후 북한의 ICBM 발사로 안보리 결의안 2397호(2017. 12. 22)가 채택되었다.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이 농산물, 기계, 전자기기, 목재, 선박 등으로 확대되고 정유제품 공급량의 상한선이 기존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감축되었으며, 노동자 전원이 24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규정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기존 안보리 결의안 2375호의 조치들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림 2] 2017년 북한의 대중 의류 및 수산물 수출 추이(반기별)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8. 2. 1).

수산물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는 대중수출(2016년 기준)의 27.5%나 차지하던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므로 의류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롭게 제재 목록에 추가된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대북투자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무역 이외의 파급력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당국의 정책대응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외화 확보와 관련된 채널(수출, 노동자 파견, 해외 투자)이 거의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북한은 내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제재로 인한 시장에서의 타격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금융 부문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으로 추측된다. 상업은행의 예금, 대부, 이자율, 결제 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화 및 외화 현금을

모두 은행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 장기 예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은행에 자금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점 등이 이 같은 정책 추세를 반영하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은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외경제 부문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제재 상황과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려해봤을 때 다른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하기보다는 수출선 다변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 등과 같은 제3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수준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와 같은 외부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데에는 정책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V. 평가 및 전망

2017년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석탄 수출의 감소가 전체 교역량 감소로 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정책기조와 차이가 있다면,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노동력 동원이 없었다는 점, 국산화에 대한 방식이 경공업, 에너지, 농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사항인 만큼 최근 들어 북한의 학술지나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발전 → 각 부문에서의 해외 의존도 감소(원료, 자재, 공정 등) → ‘자강력제일주의 실현’ → 제재 국면 극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상황은 2017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이어 2397호가 본격적으로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광물, 수산물, 의류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차단된다. 이로 인한 영향은 안보리 결의안 2321호 이후 급감한 석탄 수출의 추세와 안보리 결의안 2356호 이후 급감한 수산물 수출의 사례를 봐도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해외 노동자도 24개월 이내에 전원이 송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외화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석유수입도 제한되며

〈표 1〉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안보리 결의안 2321호 (2016년 11월 30일 채택)	안보리 결의안 2375호 (2017년 9월 11일 채택)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수출 상한 제시 - 4억달러 또는 75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 수산물, 의류(섬유) 등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수출금지 - 석유 수입 일부 제한
경제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수출 감소로 전체 교역량이 감소 (석탄 수출 감소의 기여율: 약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로 포함된 품목(예: 수산물)에서 수출이 감소 - 향후 의류 등의 품목도 감소 예상
북한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화를 통한 '자강력제일주의' 실현 - 경공업, 에너지,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자강력제일주의' 기조를 되풀이하면서 시장을 활용 - 대외부문에서 돌파구 마련을 시도

각종 합작·협력 사업 등 투자에도 큰 제약이 뒤따른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북한의 수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경제 회복세의 토대가 되었던 요인이 물가 및 환율의 안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안정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모두 종합하면, 북한경제는 올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공식부문(시장)과 주민들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외경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등 제3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에는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재와 같은 외부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남,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 제3호, 2017.
- 김남웅, 「전력생산을 늘이고 전력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 방도」,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2017.
- 김정철, 「과학기술강국건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2017년 제4호, 2017.
- 로명성,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3호, 2017.
- 류정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사상의 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7년 제1호, 2017.
- 박상철, 「현시기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1호, 2017.
- 봉은심, 「자력자강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의 위대한 동력」,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 제3호, 2017.
- 허철룡, 「현시기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2017.
- 『조선신보』,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 2017. 3. 2.
- 『조선신보』, 「만리마 시대 경제부흥과 생활향상 -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체철쇠물」, 2017. 12. 20.
- 〈웹사이트〉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접속일: 2018. 2. 1).